



6차 공공신학

(Public Theology) 세미나

행정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

*일시 _ 2008. 11. 29(토) 오전 10~12시

*장소 _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 미션홀

*주최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와사회연구원,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협찬 _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한국기독교철학회

목차/ 순서

6차 공공신학
세미나(행정학)

- 사 회 : 임 성 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1부. 주제발제(10:10 - 10:40)

공공성과 시민참여 : 이 승 종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4

2부. 지정토론(10:40 - 11:10)

- ① 노 승 용 교수(서울여대 행정학과)
- ②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12

3부. 종합토론(11:10 - 12:00)

주제 발제

6차 공공신학
세미나(행정학)

이 승 종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공성과 시민참여

I. 서론

공공신학이란 신앙의 사사화를 넘어 신앙의 공적책임 내지는 공공윤리를 강조하는 신학적 논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앙은 개인차원의 것이며, 따라서 사회현상은 교회가 아닌 세속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뿌리깊은 영속 이원론에 대한 의미있는 반성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평가될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공공신학의 등장 역시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일 수 있다. 우선 성경적으로 보아도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명백하다(마22: 39). 또한 배경적 이유야 어찌되었든 카톨릭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사회적 책임을 신앙적 의무에 대한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는 우려를 감안한다면 공공신학이 갖는 의미를 폄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신앙은 개인차원의 일이라는 전통적 이해가 강한 신학과는 달리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제 학문인 행정학(유관학문인 정치학, 정책학 포함)에서 정부(행정)는 생래적으로 공공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실체이며, 따라서 공공성은 새삼스러운 논란거리가 아니다. 즉, 공공성이란 당연히 정부과정에서의 참여자 전체를 규율하는 환경조건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적은 이슈인 것이다.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기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중요성에 비례할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물론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공공성의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핵심가치로 상정하고 국가/정부는 최소로 그쳐야 한다는 자유주의 사상에서 볼 때는 그러하다. 그러나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적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질서유지,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공공성

은 존무의 문제이기 보다는 범위의 문제로서 이해된다.

요컨대, 정부(행정)는 소위 야경국가론에서 상정하듯 질서유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하든, 아니면 적극국가론에서 주장하듯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든지, 그 주어진 범위의 공공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처리할 의무를 지닌다. 정부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한 권력주체로서의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공공의 의무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본연의 의무로서의 공공문제에 대한 책임을 책임있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정부는 일반적으로 최대의 권력과 자원의 보유주체로서, 그리고 선거기제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책임있는 정부가 되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책임있는 정부의 경우에도 책임저하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특히 현대 행정국가에서 국민의 직접통제 기제에서 먼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즉, 정부의 책임성 담보를 위한 정부통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공적책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하는 것은 중요한 공적문제가 된다. 문제는 여하히 정부의 공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II. 정부의 공적책임 확보를 위한 접근

공공성(publicness, public values)이란 무엇인가? 공공성은 개인과 관련된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사람이 관련된 문제 내지는 가치실현에 대한 책임이라 할 것이다. 다수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Held, 1986; q박정택, 1990), 개인적인 것이 아니므로 공개성(참여허용, 공정성)과도 관련이 있다(유민봉, 2005).¹⁾ 공공성은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목적이며 존재이유이다. 그런데 관료제가 주축이 된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시민의 요구에 냉담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이같은 정부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세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Burns et al, 1994).

1. 시장화(marketization, privatization)
2. 신공공관리(new managerialism)
3. 시민참여 신장(more democracy) 등 세가지이다.

첫째, 시장화 전략이다. 우파적 전략으로서 정부의 공공성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시장의 확대(민간화)를 통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접근이다. 개인적 자유의 신장과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대안으로 포함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려 한다. 공급이 아니라 촉진(enabling, not providing)이 기본접근이다. 정부의 책임성을 강제하기 보다는 책임의 영역자재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문제의 집합적 해결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다. 강자는 살고 약자는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은 소비자이다.

1) 유민봉(1995)은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공적권위에 주목하여 권위성을 공공성에 포함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정부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위성을 공공성 요소로 포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둘째, 신경영 전략이다. 시장요소를 정부운영에 도입하여 정부의 공공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접근이다. 시장화는 정부의 역할을 시장으로 이관하는 것인데 비하여, 신경영은 시장의 경쟁, 창의 요소 등 민간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관료제 중심의 정부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표면상 좌파, 또는 우파의 전략을 채택하는 개선노력이다. 단, 이같은 주체적 혁신노력은 의무적이기보다는 임의적인 것이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혁의 노력에 한계를 둬으로써 개혁의 폭에 근본적 한계를 내포한다. 시민은 고객으로 의제된다.

셋째, 민주주의 또는 참여의 신장이다. 공동체주의 내지는 진보주의적 전략이다. 집합적 참여, 시민성, 공동체가 강조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과거와 같은 가부장적인 관료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과정에서 시민의 통제를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강화, 시민적 통제를 강조한다. 우파에서도 지역사회를 강조하지만 이는 참여보다는 개인과 시장의 자유확보 차원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시민은 더 이상 고객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 시민으로 의제된다.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 세 번째 관점은 정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와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다른 관점과 차별화된다. 시장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보다는 기업 중심의 특수이익을 옹호하는 점에서, 정부의 경영화는 공공성 책무개선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세 번째가 우월하다. 또한 세 번째 관점은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책임을 동시에 요청한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의 독점적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집합적 협력에 의한 공공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개념상 거버넌스는 정부중심, 시장중심, 시민사회중심 등 유형화될 수 있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거버넌스는 정부의 외연확장으로 특징화된다. 이렇게 볼 때 거버넌스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정부로부터 시장과 시민사회, 특히 시민사회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즉, 오늘날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의 공동책임으로 의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오늘날 행정의 개념도 정부과정의 관리에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집합적 노력”으로 확장되고 있다(정용덕, 1994).

우리는 필연적으로 개별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을 논외로 할 때, 정부과정의 객체로만 존재해왔던 시민의 공적역할, 즉, 시민참여 내지는 시민정치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신학이 사사화되어있는 교회의 공적의무를 새롭게 강조하는 것과는 상통한다.

III. 정부의 공적책임과 시민의 역할

정부의 공적책임의 담보는 과거 정부 스스로의 책임(행정부 자율, 국가기관관의 견제와 균형, 중앙과 지방의 견제)에서 최근에 이르러 점차 정부외부로부터의 통제가 강조된다. 민간화는 정부역할의 축소를 통하여 기업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접근으로서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은 앞에

서 논의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은 시민의 역할 강화이다. 시민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①정부에 대한 통제, 다른 한편으로는 ②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의 주체적 역할 강화이다.

실제로 시민이 공공성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책임/의무를 갖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공공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자는 바보로 여겨졌다. 물론 그리스 사회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극적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시민의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 공공봉사는 당연하고 명예로운 의무로 여겨졌다. 즉, 시민은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영역에서의 봉사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물론 그리스 시민민주주의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는 국가규모의 성장에 따라 대의민주제를 기축으로 하고 있으며, 대의제 하에서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한다.

한편으로는 시민참여를 선거에 한정하고, 그 외의 직접적 참여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입장이 있으며(Sartori, Schumpeter etc.),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실현과 민주주의 보완을 위한 적극적 옹호론이 있다(Barber, Pateman etc.).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없다고 볼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시민은 참여를 통하여 공공성과 연계된다.

생각건대, 정부의 공공책임의 강화, 시민의식의 고양, 시민복지의 실질적 증대를 위해서 시민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는 실질적 필요를 논하기 이전에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점도 인식되어야 한다.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 요건이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승중, 1995). 첫째, 일반적으로 참여는 비용이 소요되는 행위이며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참여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훼손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종 참여제도에 열위층 참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물론 사회불평등의 해소는 더욱 근원적인 해소책이겠지만, 사회체제 자체의 급진적 전환을 요구하는 점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참여자의 참여의지와 함께 참여능력이 요구된다. 참여는 그 자체로서 목적과 함께 공공성 실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참여에 대한 의지(activism)와 함께 참여능력-교양(informed)과 덕성-이 요구된다. 이같은 참여능력 배양을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를 위한 의식은 참여과정을 통해서 배양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종종 참여하기에 미흡한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의식의 미흡함을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참여 자체가 죽게 되는 악순환이 필연적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기회를 확장하여 참여과정에서 시민의식이 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참여의 실질화가 가능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공직자의 참여수용성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대의 교육도 참여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민참여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우월권력(exploitive power)에 대한 시민의 열위권력(defensive power)을 보완하는 매개 권력(intervening power)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민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논의

되어야 한다.

IV. 교회와 공공신학에의 함의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이다. 그러나 정부의 독점적 지위는 정부실패의 우려, 시민사회와 시장의 보완가능성 때문에 더 이상 공공성 실현을 위한 독점적 주체이지 않다. 시민과 기업도 공공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거버넌스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정부와 더불어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실질적 주체는 아무래도 시민이다. 기업에게서 공공성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노력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예외적일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마저 시민과 정부의 통제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의 공공성에 더하여 시민의 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교회(또는 공공신학)가 갖는 공공성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교회의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성 실현의 주체인 정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무성 담보를 위한 통제의 필요, 그리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생산주체로서의 활동의 필요 때문에 사적영역의 구성원인 시민의 공적참여를 장려하게 됨을 제시하였는 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경이 요구하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로서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도 행정민주화가 미흡한 우리의 경우, 행정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중요한 대상이다.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로서 교회가 공공문제에 참여할 때 시민에게 요구되는 몇가지 요구가 그 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원리적으로 볼 때 사적부문의 구성요소의 공적영역에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① 시민참여의 원활화를 위해서 참여제도의 강화가 요구되듯이 교회에서도 교회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예산, 조직, 교육)이 구축되어야 한다. ② 무책임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교회의 참여의지와 더불어 참여능력(교양, 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과 동일할 수는 없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시민교육을 통하여 기독교시민성 교양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참여는 기독교시민성 교양을 위한 유효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③ 교회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일차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④ 시민참여에 있어서 정부공직자의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요구된다고 하였거니와 동일한 수용성이 목회자 집단에게서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하였으나, 교회에서는 공동체 특성상 참여활동의 발현을 위한 초기요건으로 목회자의 수용성이 중요한 때문이다. ⑤ 시민참여를 위해 시민단체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참여를 위해서 기독교시민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제도로서의 교회는 구성원인 기독교시민의 사회참여를 매개하고 촉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참여하는 교회의 확장은 개별적 시민의 집단적 참여의 효과적 매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시민단체의 육성과 지원은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교회의 건강성 회복이다. 앞에서 교회의 사회참여에는 참여의지만이 아니라 참여능력(교양, 덕성)이 요구된다 하였는 바, 이는 환언하면 교회의 건강성에 다름 아니다. 지탄받는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데는 실제적 효과에 있어서나 규범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 서라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물론 건강성이 사회참여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따라서 건강해질 때 비로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참여는 건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참여과정에서 건강성이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과정에서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점이 건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건강해야만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일을 바탕으로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신학은 공공참여의 필요성과 함께 교회의 참여능력에 대한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필요성은 공공성을 영역과 윤리라는 두가지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나누어 이해할 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공공성이란 단순히 교회가 공공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윤리적 참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공공영역으로의 원심력적 관심 확장과 함께 교회의 건강성 회복에 대한 구심력적 관심을 병행함으로써 더욱 균형있는 신학사조로 고착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정부는 공공성 실현을 위한 일차적 주체로서 다양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러므로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대부분의 공공문제에 대해서 일차적 관여주체이며, 또한 가장 많은 자원과 권력의 보유주체인 정부의 활동 즉,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은 당연하다. 또한 실제로 정부정책의 목록으로부터 일감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정부가 표명하는 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 이때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은 정책주체인 정부에 대한 통제,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활동(공공서비스생산)으로 연계될 것이다. 전자는 정부통제를 통한 간접적 공공문제해결방식이며, 후자는 직접적 문제해결방식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표명으로 교회(공공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모든 공공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도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특히 이같은 경계지대에 대한 예리한 관심을 통하여 정부의 공공성 역할을 다지고 보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정택, 공익의 정치행정론. 대영문화사.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2008,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북코리아.
 이승중,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
 정용덕, 1994,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Burns, Danny, Robin Hambleton and Paul Hoggett, 1994,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Macmillan.
 Held, Virginia,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interests(강형기, 이상용 역, 공익과사익, 1986).



6차 공공신학
세미나(행정학)

노승용 교수
서울여대 행정학과

토론 2

6차 공공신학
세미나(행정학)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이승종 교수의 '공공성과 시민참여' 에 대한 토론


국가와의 관계는 교회의 오랜 고민이었다.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나 마틴 루터의 두왕국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국가의 문제는 신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에는 사회가 단순하였기 때문에 국가, 즉 정부가 사회의 전부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공공성의 문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라고 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전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교회는 어떠한 공공성을 가져야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공공성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승종 교수의 본 논문은 우리에게 시민사회의 한 축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공공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회가 공공문제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 교회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첫째 교회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얼마 전 만났던 한 교회의 목회자는 내년도 목회계획을 준비하며 실제로 NGO를 통한 사회봉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년도에 몇몇 NGO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가입된 숫자에 비례하여 교회는 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이에 부합된 모습이라고 보인다. 특히 네 번째 목회자의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회가 이러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둘째는 참여능력을 고양해야함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교육전통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제안이라고 본다. 특히 목회자들이 수용성을 가지고 이 주제를 교인들에게 공개하고, 일반적인 설교나 공부시간을 이용하여 교육하며, 이러한 부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세워 강의를 통한 참여를 이끌어야할 것이다. 셋째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했는데 참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참여'의 문제를 논의하면 나타나는 오해가 바로 '참여'라

는 것이 곧바로 정치성이나 과격성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아직 우리사회는 시민운동이 일상의 현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교회가 이 문제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본다. 그리고 다섯째 기독교민단체의 육성을 주장하였다. 기독교민의 사회참여를 매개하고 촉발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한다. 아무래도 아직 교회의 의식이 사회참여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심에 대해서 사회가 받아들여 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종교를 '특수한' 분야로 놓고 보는 상황에서 더욱 이러한 우려가 더하다. 이런 면에서 이승중 교수가 제안한 수용성의 문제는 정부와 교회 양쪽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것은 본 논문이 교회를 지역교회로 한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지역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협이나 한기총, 또는 한목협과 같은 연합단체들도 있고, 교단이나 노회/연회 등의 형태, 그리고 지역교회연합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좀 더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행정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공공신학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이승중 교수께 감사사를 드린다. 



기윤실 공공신학 세미나

일정 안내

1차 공공신학 세미나(간담회)

1. 논의내용 :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 시작
2. 일정/장소 : 2007년 7월 23일(월) 오전 11시 /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차 공공신학 세미나

1. 내용 : 공공성에 대한 사회 이슈별 주제 발제
2. 일정/장소 : 2007년 10월 6일(토) 오전 10시-3시 / 명동 청어람
3. 발제 : ① 여는 발제-세계화 시대의 한국교회와 공공신학 :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②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 노영상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
 ③ 성도의 삶과 공공성 : 장신근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④ 기업과 공공신학 : 강원돈 교수(한신대 신학과)
 ⑤ 양성평등과 공공신학 : 김은혜 교수(송실대 교양학부)
 ⑥ 시민운동과 공공성 : 박병옥 사무총장(경실련)
 ⑦ 철학과 공공신학 : 최한빈 교수(백석대 기독교철학)
 ⑧ 시론-기윤실 운동의 신학적 토대에 대한 모색 : 양세진 사무총장(기윤실)
4. 토론 : 신원하 교수(고신대 기독교윤리학), 황영익 목사(서울남교회), 신기형 목사(이한교회), 김호경 교수(서울장신대 신학과), 양세진 사무총장(기윤실), 최태연 교수(백석대 기독교철학)

3차 공공신학 세미나

1. 주제 : 성경에서 본 공공성
2. 일정/장소 :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7시-9시 / 명동 청어람
3. 발제 : ① 존 하워드 요더의 대안 공동체 신학윤리가 바라보는 공공신학 : 신원하 교수(고신대 기독교윤리학)
 ② 신약성서의 공공성 : 김호경 교수(서울장신대 신학과)
 ③ 구약성서에 나타난 공공신학 : 이윤경 교수(안양대 신학과)

4차 공공신학 세미나

1. 주제 : 철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
2. 일정/장소 : 2008년 4월 26일(토) 오전 10시 / 여전도회관 8층 회의실
3. 발제 : ① 서양철학에서 본 공공성 : 최대연 교수(백석대 기독교철학)
② 동양철학에서의 공공성 : 배요한 교수(장신대 철학)
4. 토론 : 문시영 교수(남서울대 교양학부), 성현창 박사(와세다대 동양철학 전공)

5차 공공신학 세미나

1. 주제 : 사회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
2. 일정/장소 : 2008년 7월 5일(토) 오전 10시 / 여전도회관 8층 회의실
3. 발제 :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4. 토론 : 이기홍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이승훈 박사(연세대 BK21 '사회적 포섭과 배제' 사업단)

6차 공공신학 세미나

1. 주제 : 행정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
2. 일정/장소 : 2008년 11월 29일(토) 오전 10시 /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 미션홀
3. 발제 : 이승중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4. 토론 : 노승용 교수(서울여대 행정학과),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공공신학 발제문 출판

1. 취지 :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기윤실 공공신학 세미나 발제문들을 책으로 출판하여 공공신학에 대한 일반 목회자와 연구학자들,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특히, 교회신뢰, 교회의 공공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제간 연구를 통한 공공성 논의를 다룬 공공신학 세미나 발제문의 출판은 시의적절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진행 : 발제자들의 출판동의와 발제문 수정 후 2월말까지 출판을 목표로 진행한다.
3. 2월 말 출판될 경우 신학교를 중심으로 신학기 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6차 공공신학

(Public Theology) 세미나

행정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CHURCH TRUST NETWORK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_ 02-794-6200

팩스_ 02-790-8585

이메일_ cemk@hanmail.net / ctn@hanmail.net

홈페이지_ www.trusti.kr / www.trustchurch.net